주요 내용

▌베를린 선언과 남북 경협 ▐

□ **베를린 선언의 배경과 내용**

· **(의미)**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임

· **(배경)** 베를린 선언은 최근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 변화와 북한의 실용주의적인 대내외 정책 등을 배경으로 함

· **(경제 지원의 주요 내용)** 정부는 북한 당국이 요청해 오면 북한의 농업 구조 개선과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임

□ **남북 경협 전망**

· **(당국간 대화 전망)**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4월 총선 이후 차관급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며, 정부 역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

· **(남북 경협 전망)** 이 경우 정부 차원의 재정적·행정적 지원하에 비교적 대규모의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

· 남북 경협은 당국간 대화가 발전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

현안 분석

베를린 선언과 남북 경협

베를린 선언의 의미와 배경

- **(의미)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임**
  - 베를린 선언은 4대 과제로서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 회복 지원, 한반도 냉전 종식과 남북 평화 공존, 이산 가족 문제 해결,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음
  - 당국간 남북 대화 재개와 특히 남북 특사 교환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

- **(배경) 베를린 선언은 최근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 변화와 북한의 실용주의적인 대내외 정책 등을 배경으로 함**
  -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 변화 : 북미 베를린 합의에 따른 북미 협상의 진행, 북일 수교 협상 재개 등
  - 북한의 실용주의적 정책 :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 관계 증진, 이탈리아와 수교 등 대서방 실리 외교 강화, 헌법 개정을 통한 시장 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등

베를린 선언의 주요 내용

- **(대북 경제 지원의 주요 내용) 정부는 북한 당국이 요청해 오면 북한의 농업 구조 개선과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**
  - 농업 지원 : 비료·농약·농기구 등 영농 자재 지원, 관개 시설·영농 기술 등 농업 구조 개선 지원 등
  - 사회 간접 자본 지원 : 도로, 철도, 항만, 통신, 전력 지원 및 남북 육로 연결 추진

- **(정부의 남북 경협 추진 방안) 정부 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**

· 교역 및 임가공 활성화, 금강산 관광 사업의 확대 발전, 서해안 공단 조성, 자동차·전자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민간급 남북 경협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
· 중·소 규모 경공업 협력 사업 추진 및 대규모 협력 단지 조성 사업 지원 등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추가적인 발굴 추진
·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, 필요시 남북협력기금 지원
· 이와 같은 대규모 경제 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투자보장협정, 이중과세방지협정, 청산계정협정 및 3통 협정과 같은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임

- **(북한의 반응) 베를린 선언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은 「노동신문」 논평을 통해, 우리 정부가 실제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당국간 대화와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음**
  · 종래와는 달리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, 북한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

남북 경협 전망

- **(당국간 대화 전망)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4월 총선 이후 차관급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며,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급 회담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있음**
  · 지난 3월 21일 김대통령은 YTN과의 회견에서, 대북 농업 및 사회간접자본 지원은 참여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형식으로서, 대가없는 인도적 지원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말하였음
  · 김대통령의 이 발언은 기존의 '상호주의 원칙'의 약화로서, 우리 정부의 실제 행동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됨
  · 북한은 경제 실리 획득을 위해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올 것으로 보이며, 우리 정부 역시 당국간 대화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

- **(남북 경협 전망) 차관급 회담이 재개될 경우 정부 차원의 재정적·행정적 지원하에 비교적 대규모의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**
  · 이 경우 우선 대북 농업 및 사회간접자본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

· 정부는 북한의 정식 채널을 통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베를린 선언의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
· 현재 건설교통부는 남북한 철도 시설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며, 재정경제부는 대북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IBRD,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
· 또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,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
· 하지만 당장 최고위급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, 남북 경협은 북미 관계 및 남북 당국간 대화가 발전되는데 따라 점진적·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

- **(북미 관계) 북미 베를린 합의에 따라,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(차관급 회담)이 진행되고 있음**
  · 3월 8일부터 15일까지 뉴욕에서 준비 회담이 열렸으나, 별다른 소득없이 끝남
  · 뉴욕 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금창리 지하 시설 재방문, 신포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북한의 손실 전력에 대한 보상, 북한의 테러 지원국 삭제 문제 등이었음
  ·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, 북미 고위급 회담과 그 준비 회담에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

- **(북일 관계) 북한과 일본은 1992년 11월 이후 7년째 중단되고 있는 수교 본회담을 4월 중에 개최할 예정**
  · 지난 3월 북일 적십자 회담에서 일본은 세계식량계획(WFP)을 통해 북한에 쌀 10만톤을 지원하고, 북한은 북한 거주 일본인 처의 고향 방문을 재개하기로 하였음
  · 예비 회담에서 최대 쟁점의 하나였던 북한의 일본인 납치 의혹 문제는 본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
  · 일본의 대북 접근 속도는 미국의 대북 접근 속도를 앞서 나가지 못할 것이며, 따라서 북일 관계 개선은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

(김정균 수석연구위원 jkkim@hri.co.kr ☎ 3669-4081)
(이태섭 연구위원 tslee@hri.co.kr ☎ 3669-4084)